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재정정책정보지

# 세종재정

2024. 5

2024년 두번째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본 정보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서 최근 중앙부처와 국내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한 국가·지방재정 연구동향과 법령 제·개정 사항, 이슈 등을 파악하여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보지 개선에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여 더 심도 있는 자료 작성 및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CHAPTER. I

### 재정분석

세종시 교육재정, 교육개혁과 사회적 난제 속에서 안착할 수 있을까	05
지방공기관과 출자·출연금, 대행사업에 대한 구분과 통제방안	10
사회복지예산 증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14

## CHAPTER. II

### 재정이슈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방안	20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 더 나은 방향은?	22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	24
OECD회원국 교육재정 비교검토와 정책시사점	26
재정 뉴스	28

## CHAPTER. Ⅲ

### 재정정책

2024년 지방세수 여건 진단과 시사점	32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어떻게 쓸 것인가	34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내부경비절감 노력과 시사점	36

## CHAPTER. Ⅳ

### 경제동향

정부 경제동향(기획재정부)	39
정부 재정동향(기획재정부)	40
KDI 경제동향(한국개발연구원)	41
지표로 보는 충청권 경제동향(한국은행)	42
NABO 경제동향(국회예산정책처)	43
최근 세종지역 실물경제 동향(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44

## CHAPTER. Ⅴ

### 재정통계

주요 경제지표	46
세종시 주요 통계	49
세종시교육청 주요 통계	50

# I. 재정 분석

## 요 약

- **[세종시 교육재정, 교육개혁과 사회적 난제 속에서 안착할 수 있을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부의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의 교육개혁과 사회적 난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세종시 교육재정의 대처방안 모색 필요
- **[지방공기관과 출자·출연금, 대행사업에 대한 구분과 통제방안]** 지방공기관에 교부·위탁하는 예산이 증가하는 반면 해당 기관에 대한 이해와 통제, 감시는 미흡한 원인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 모색
- **[사회복지예산 증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및 노령화 현상의 급속한 전개,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사회복지예산 증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방안 마련

# 01. 세종시 교육재정, 교육개혁과 사회적 난제 속에서 안착할 수 있을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회

## I. 서론

지난 2023년은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교육체계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교육계에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그 후폭풍은 아직도 교육계 전반 곳곳에서 논란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학령인구 감소와 국세 부족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까지 중앙부처에서 교육현장까지 많은 사안들이 이해당사자들의 갈등과 대립으로 쟁점화되었고 아직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지방교육재정 또한 비상상황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발생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대급 세수평크는 곧바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졌고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는 줄어든 세입만큼 허리띠를 졸라매 세출예산을 잘라내거나 지방채 발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으로 대처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지방교육의 개혁과 혼돈의 시기에서 우리시의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과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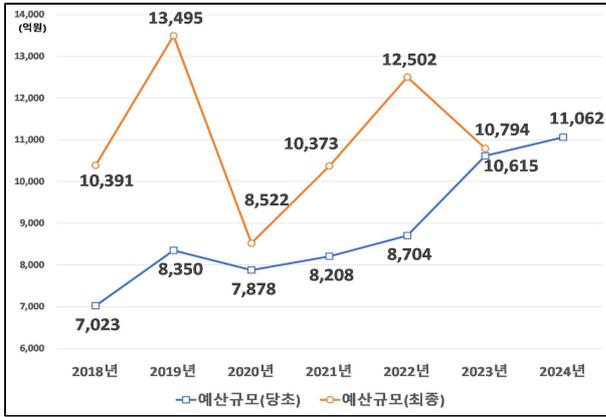
## II. 세종시 교육재정의 현주소

### 1) 세종시 교육재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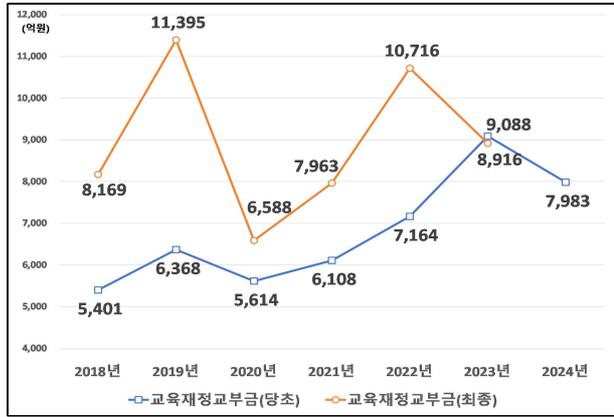
재원의 대부분을 이전수입에 의존하며, 내국세와 연동되어 변동성이 심한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에 따라 세종시의 교육재정 또한 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감폭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2년의 경우 전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과 제2회 정부추경예산 편성에서의 국세수입 증액 경정에 따른 교부금 내국세분 추가 발생으로 전년·당초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정부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 부족이 발생한 '23년부터는 이전수입 감소에 따라 예산액과 결산액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규모】



【교육재정교부금 세입예산 현황】



‘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104억원(△12.2%) 감소하였음에도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46억원(4.2%)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부금 감소 등으로 부족해진 재원을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하였기 때문이다.

\*기금전입금(최종예산) '20년178억원 → '21년500억원 → '22년0원 → '23년280억원 → '24년(당초)1,606억원

기금에 의한 부족 자원 충당은 안정적 교육정책 추진과 근래 확장된 재정에 따라 확대된 사업 규모를 일시에 축소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교육지책일 수 있겠으나, 향후 예산안 편성 시에도 자원 부족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은 커 보이며, 한정된 기금 적립액을 고려하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소요 감축 노력을 통한 재정 충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 2) 세종시 교육재정 전망

향후 국가재정의 긴축 기조 유지, 국제적 경기둔화 지속 등 재정 여건의 압박과 자원의 어려움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청의 경우 지방교육채 발행과 기금 적립금 외에는 자원 부족을 충당할 방법이 달리 없기에, 큰 폭으로 감소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한 부족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속 충당할 경우 적립된 기금이 급속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 부족과 기금의 급속한 소진으로 인해 자원 충당 여력이 바닥나는 이중고 상황 발생 시 예산 급감으로 인한 재정충격이 예상되기에, 자원 감소 및 예산 규모 축소 상황에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과 유보통합, 늘봄학교 전면 시행,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재정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재정 현안들은 지방교육재정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현안

교육부는 2023년 업무추진계획에서 4대 교육개혁분야와 10대 핵심정책을 제시하였으나, 올해 사안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도를 고려하여 교육개혁 3대 정책과 10대 과제로 축소·재편하였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소멸로 고조된 사회적 난제들을 교육개혁으로 해결한다는 과감한 취지에 비해 중앙의 기획과 현장에서의 실천의 괴리, 첨예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와 이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 등은 교육개혁의 험난한 앞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늘봄학교, 유보통합, 대학개혁 등 교육개혁으로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개편 논의가 있었던 민감한 주제로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교부금 개편 요구가 다시 표면에 등장하였는데, '22년 교부금 예산이 '21년 본예산보다 11.8조원이 늘어나자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교부금은 계속 증가하는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산정 방식을 개편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학령인구가 감소하였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여 교육재정 여건이 충분히 개선되었으므로, 여유 재원을 다른 분야에 지출하여 정부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산정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교육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급 수와 교사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노후건물 개축·보수 등으로 향후에도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종시 교육청 세입의 72.2%를 차지하는 만큼 그 재원의 산정 방식이 지방교육재정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 예산배분의 합리성과 함께 교육재정 수요와 초·중등교육의 질을 아울러 고려하여 재원산정 방식의 개편 방향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청에서 교부금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늘봄학교 전면 시행

늘봄학교란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형태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며, 출산을 저하와 돌봄 공백, 사교육비 절감을 통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분리된 방과 후와 돌봄 체제를 혁신하고자 고안되었다.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위해 교육부는 올해 예산 1조 1657억원(전년대비 4,672억원 증액)을 투입한다고 하였으나, 교육 재정 여건의 상황 악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전용 공간 부족과 교사 업무 가중 문제로 교원단체 등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늘봄학교 시설 인프라 구축 비용, 기간제 교사(또는 근로자) 채용, 신규 채용에 따른 교육 및 훈련 비용 문제 등으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나 교육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이는 결국 교육청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유보통합

유보통합은 그동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맡았던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하도록 한 것으로 현행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영유아 교육의 질을 상향 평준화 한다는 측면에서 유보통합은 꼭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재원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 또한 잇따르고 있다.

유보통합으로 시설 및 교사 처우 개선, 연수와 교육 비용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정부는 정확한 유보통합의 정확한 모델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액 국고 지원 등 유보통합 시행에 따른 재원 지원이 담보되지 않고 있어 교육재정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 III. 맺음말

2024년의 정부의 교육정책은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지역 혁신을 위한 대학개혁, 교육발전특구 도입 등 전년도 정책과제를 세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교육개혁 3대 방향은 교육정책이 단순히 현상 유지와 점진적 개선 정도 수준에서 추진되지 않을 것이며, 교육현장 또한 극적인 개혁과 변화 요구에

일방적인 순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교육계와 정부 정책은 괴리는 복잡다단한 이해관계의 갈등과 대립, 시행착오를 거듭할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또한 고단한 가시밭길의 연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여부와 방향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같이 지방교육재정이 전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세수 사정에 종속되어 등락을 반복한다면 공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한다면 지방교육은 예산부족으로 자체사업을 대거 폐지하거나 국가시책사업의 예산편성을 거부하게 될 우려도 상존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지방교육은 사면초가의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교육계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어 교육개혁을 완성하고, 중앙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 확보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를 통해 교육수혜자를 위한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 교육자치를 완성해 나가길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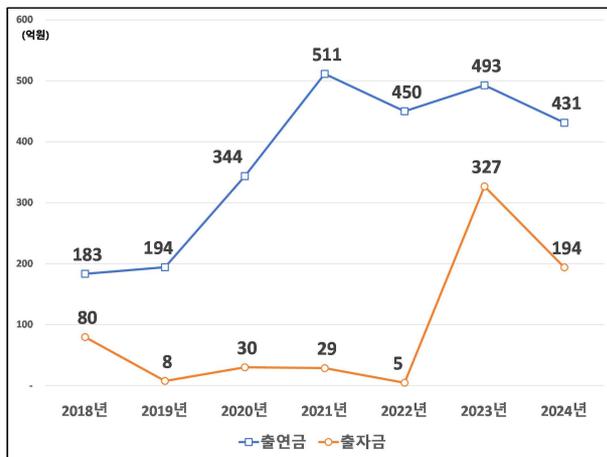
# 02. 지방공기관과 출자·출연금, 대행사업에 대한 구분과 통제방안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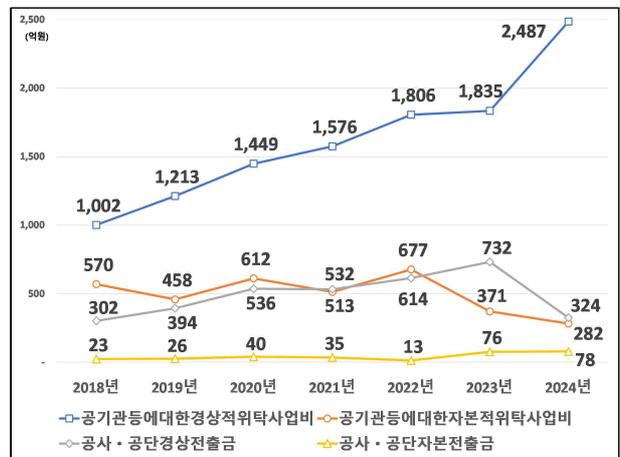
지방재정은 집행의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이따금 사업의 대상이 공공기관인지 민간부문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기관이 지방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공단과 공사, 출자·출연기관이며 이에 집행하는 출자·출연금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전출금일 것이다.

시에서 지방공기관에 교부·위탁하는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나 정작 지방공기관에 대한 이해와 통제, 감시는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출자금, 출연금 규모】



【공기관 대행사업비, 전출금 규모】



공기관 대행사업의 급증은 행정 조직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 행정이 기피하는 분야를 공기관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 편의를 위해 공기관 예산 덩치만 키우는 부실 행정 초래, 공기관 대행사업 비중이 과도하게 늘면서 고유 목적사업 비중은 낮아지고 비정규직 대거 양산, 무분별한 공기관 대행사업 전환으로 불필요한 수수료 발생, 관행적인 사업 반복, 대행 만능주의 등 여러 방면에서 지적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개념과 해당기관에 집행되는 교부금, 보조금, 대행사업비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II. 지방공기관에 대한 쟁점과 통제방안

### 1) 지방공기업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개념과 구분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직영기업),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공사,공단)을 일컫는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을 갖지만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업성도 있다.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예산서에 상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로 편성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인 관리자를 두고 직접 경영을 관리·감독하며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공무원이다.

공사·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이다. 공사·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법인의 형태로 간접 경영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민간 성격의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와는 달리 지방공단은 지방정부의 공공성 업무를 전담하여 대행한다. 지방공단은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주로 시설관리(주로 공설주차장, 시립 체육시설 등) 분야에 집중되어 대부분은 업무 중 일부를 수탁받거나 또는 대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공단은 자치단체 예산으로만 운영되며, 민간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공사와 공단의 핵심적 차이는 결산 결과 손익금 처리 가능 여부로 공단의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상 손익금 처리 규정이 없어 수익성 위주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사는 손익금 처리와 운용이 자유로워 공공성과 이익을 모두 창출할 수 있다.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출자기관은 농업회사법인세종로컬푸드(주), 세종벤처밸리 산업단지(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일부(10% 이상)를 출자하여 설립한 영리기관(주식회사)이다.

출연기관은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신용보증재단, (재)세종테크노파크,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과 같이 지자체가 재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기관(재단법인)이다.

공단과 공사,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관운영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급을 반영하는 형태로 사후적인 통제

수단을 두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자치단체장에게만 예산서와 결산서, 재무·회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에는 제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예산편성과 심의·의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아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하여 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쟁점과 통제방안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체육, 의료 등 주민의 소득·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 출자·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금은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친 후 예산에 편성되어 출자·출연기관으로 진출된다.

하지만 출연금은 어떤 사업에 얼마나 썼는지 내역을 남기거나 사후 정산하여 제출, 공시할 의무가 없어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언론과 의회에서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예·결산서와 회계재무보고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제출되며, 의회는 출자·출연금의 사전동의안에 대한 의결권만을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보는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기에 의회의 통제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매년 출연금 과다 편성과 불용액 발생의 반복, 출연금 집행잔액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해 다음연도 자체재원으로 활용, 예산편성·지출에 대한 적정성 검증, 사전검증이나 사후평가 없이 출연금 지급 등이 되풀이되는 것은 고질적인 출연금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제도적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나 정부의 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직접 조례 제정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정산 의무와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 정산결과에 대한 의회 보고 등을 명시하여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리시 또한 지난해 말 조례 개정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예·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였으나, 출연금의 집행과 사후 정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또한 고민하여야 할 시점이다.

## 3)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쟁점과 통제방안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광역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이나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해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구분한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매년 그 규모가 늘어 2024년 1회추경 기준 2,769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관한 제대로 된 기준이 없어 사무의 위탁·대행이 다소 무분별하게 행해질 수 있으며 시의회의 견제 범위 밖에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민간위탁은 예산편성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아야 하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사전적·사후적으로 제도적인 재정통제 수단이 미흡하여 편성과 계약·집행·정산 등에 있어 예산심사와 결산, 공공감사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산하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조례·규칙 없이 공기관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위법 논란은 물론이고 절차상 하자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출연금과 같이 많은 지방의회에서 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검토와 시의회 동의·보고 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사무 위탁을 개선하고 대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다.

우리시 또한 더 늦기전에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공기관 대행사업의 범위와 선정기준,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평가, 실적보고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공기관 위탁·대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III. 맺음말

행정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관을 통한 사업 추진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며, 우리 시와 같이 단층제로 만성적인 행정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수천억원의 예산이 공기관을 통해 집행되기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제도적인 통제 방안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조례를 통하여 공기관에 대한 출연·전출·위탁사업비에 대한 사전 의회동의를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정산제도 마련과 정산검사 및 실적 보고, 비용·원가산정 적정성 제고, 예·결산 보고, 사업성과 관리 등 재정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의 법적·제도적 통제 기능 미흡이 비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공기관 대행사업의 재정지출과 행정에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제도적인 사전·사후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세종시민에게 효율적이고 효율성있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의회 모두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03. 사회복지예산 증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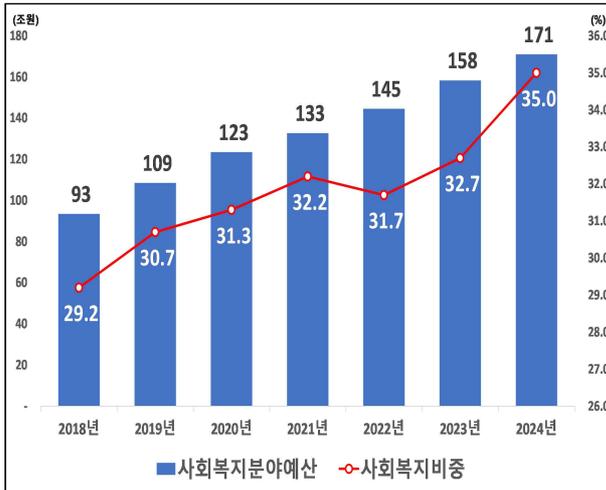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회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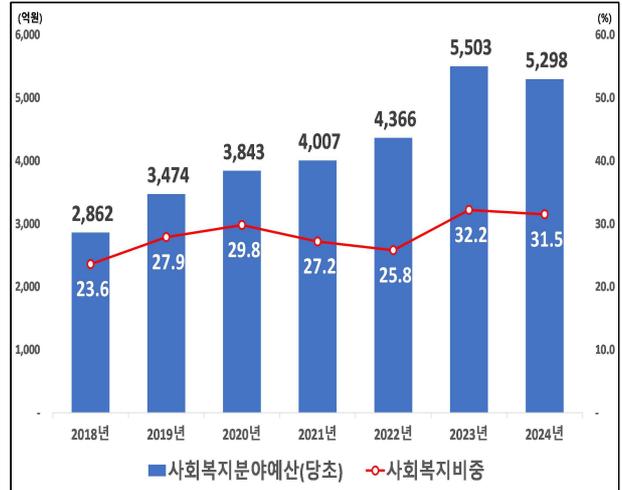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지방재정은 자체수입과 이전수입 모두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증가세는 완화되었으며 2023년부터 감소추세에 들어섰다. 특히 2023년에는 고물가 고환율고금리로 대표되는 경기침체를 겪으며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였고,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예산은 경제여건과 세입 감소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법적·의무적 경비로 구조조정이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이다. 국가적 표준이 정해져 있는 국민기초수급비와 기초노령연금 등 매칭이 의무화된 경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출산장려사업이나 노인복지성 경비 등은 이미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대상자와 금액이 결정되어 있어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국 사회복지분야 현황】



【세종시 사회복지분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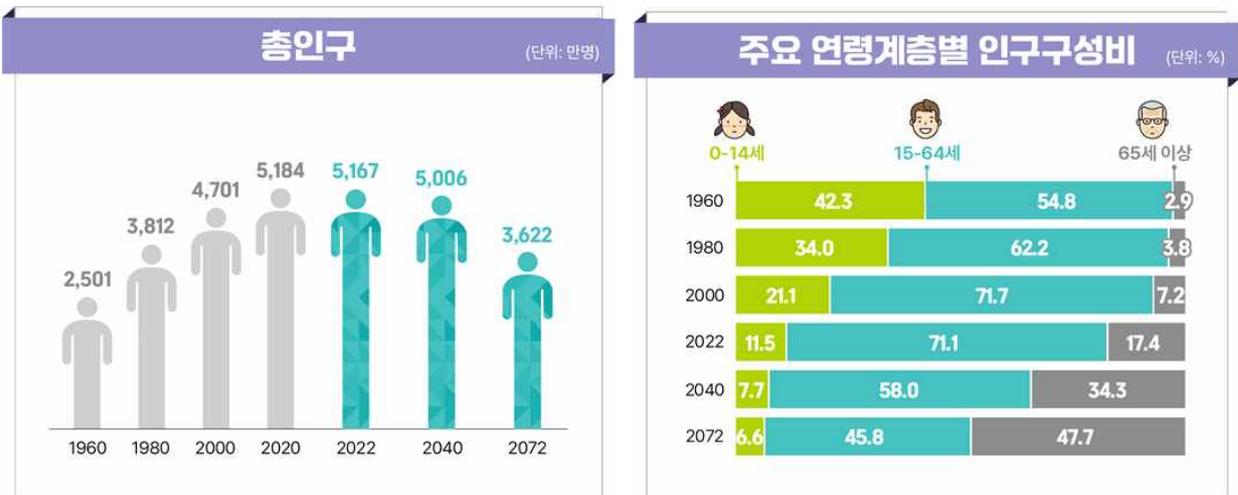
현재의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와 같은 복지예산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현실인 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있는가? 에 대한 의문과 답을 찾아보고자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가 다른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분석하였다.

## II. 사회복지예산은 왜 늘어나고 있을까?

### 1)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노령화 현상의 급속한 전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 노령화 현상이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지역소멸이 국가의 주요과제로 자리잡은지 오래이며 국가 존립까지 위협하는 인구위기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형국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감소하고, 50년 이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생산가능 인구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소멸 가속화 등 대응이 필요한 재정 현안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 2)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현대의 사회복지의 더 이상 저소득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개념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대상(저소득 약자 보호 → 복지욕구가 있는 모든 자), 공급주체(공적공급, 법인위탁 → 복지 다원주의), 비용부담(국비지원, 무료복지 → 본인 일부 부담), 서비스의 질(최저기준 보장 → 삶의 질 향상) 등 여러 방면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지원·저출산·초고령사회 등 심각한 현안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려운 국가재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은 122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조원(12.1%) 증가하였고, 새로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에는

청년, 장년, 중산층 등 새로운 복지수요까지 포함한 전 국민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사회복지사업과 예산은 더욱 확대될 전망에 있다.

### III.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현안

지난 10년간 다른 예산보다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월등하게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예산이 급증함에 자치단체의 재정어려움 변화와 재정현안이 발생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지방재정 부담 증가와 다른 분야의 지출 변화, 재정자율성측과 지출권향상에 제약

저출산, 고령화 심화 등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하여 보육과 노인 관련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예산이 지방예산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 보조사업 관련 국비와 대응하는 지방비가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의 부담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사회복지사업의 확대로 지역개발, 지역경제활성화,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자체사업에 투입할 일반재원이 부족해지고, 자체사업 비율도 감소하였다.

요컨대 지방세입 확충이 제한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주도 복지사업의 확대에 인하여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대응한 자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규 자체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 고유의 특수성을 살린 지자체 자체사업 또한 위축된다면 이는 지역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재정책임성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체계와 차등보조율의 비합리성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간 자원 분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부재한 상황이며, 복지사업마다 기준보조율 책정이 정치적 협상이나 소관 부처의 임의적 결정을 통해 이루어져 있어 복지부문별로 기준보조율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차등보조율 또한 재정자주도의 한 구간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분류되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며, 광역과 기초간 지방비 분담 또한 법규나 조례가 아닌 예산부서의 임의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아 기초단체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재정력 격차에 따른 자치단체별 복지사업의 격차 발생과 현금성 복지지출 증가

자체사업의 경우는 재정력이 우수한 정도에 따라 복지사업의 격차에 일정한 작용을 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에 따라 복지사업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표를 의식한 선심성 현금성 복지사업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현금성 복지지출의 증가는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자칫 선심성 복지증대나 재정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에 복지사업의 정책목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선별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의 한계와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조정 제도의 낮은 실효성**

현행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은 지자체 복지수요 반영에 미흡한 실정이며,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하여 급증하는 복지사업비에 대한 재정부담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및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조정에 대한 원칙이 명확하지 않으며 개별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까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많은 신청건수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 **IV. 사회복지예산의 전망과 개선방안**

상술한 바와 같이 갈수록 커져가는 사회복지예산과 재정현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몇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어느 한 쪽에 지나친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무에 대한 재정배분의 원칙과 합리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간 재원분담 체계의 합리적 정립과 광역과 기초간 명확한 재원분담과 지방비 부담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갈수록 커지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대응지방비 조달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복지사업 규모의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정부시책에 따른 일방적인 사업통보가 아닌 중앙과 지방 간 충분한 협의와 설득 과정을 통해 지자체 자체복지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장기적 지방비 재정 소요 추계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하며, 사회복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주민참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환, 주민소송등과 같은 제도와 장치를 활용하여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복지사업의 성과평가와 신규사업 신설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유지여부를 결정하며, 보통교부세산정기준과 차등보조율 제도를 개선하여 자치단체의 재정 사정과 실제 복지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공의 의지만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를 해결하기는 어렵기에 기업·기관·단체·개인 등 민간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이다.

## II. 재정 이슈

### 요 약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방안]** 우리나라의 4개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세종·제주·강원·전북)는 법률의 개정 없이 지방세를 확충할 과세자주권이 없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기적으로는 세외수입 등 확충, 장기적으로는 과세자주권을 부여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등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K-패스, 더 나은 방향은?]** 국토교통부 'K-패스' 및 지역맞춤형 대중교통이용권 등 다수의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운영 시스템의 안정화를 유도하고, 장기이용권의 합리적 선택이 보장되도록 지원 대상별 상정가능한 시나리오를 다수 비교·공시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하여 사후 성과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 강화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정부는 2002년부터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확한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조기집행 여부 및 목표를 결정하는 등 제도의 제한적 운용 검토 필요
- **[OECD회원국 교육재정 비교검토와 정책시사점]**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교육재정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또한 정부간 재정구조를 개편하고 교육자치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옴. 이와 관련해, OECD회원국 간 교육재정 통계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해하고 관련 논의에 참고하고자 함
- **[재정 뉴스]**

# 01.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시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방안

출처·링크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방안'](#)

□ 우리나라의 4개 특별자치시·도(세종·제주·강원·전북)는 과세자주권이 없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기적으로는 세외수입 등 확충, 장기적으로는 과세자주권을 부여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 과세자주권 없는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시

○ 지방세 체계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여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방세를 확대할 수 없음. 즉, 자신의 힘으로 지방세를 확충할 과세자주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을 확대하려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 □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시 재정특례 현황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재정특례 제도 등(‘2023.12.31.기준)】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시기	2006.7.1.	2012.7.1.	2023.6.11.	2024.1.18.
근거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총 인구수	675,252명	386,525명	1,527,807명	1,754,757명
소관	기초자치단체 없음	기초자치단체 없음	기초자치단체 있음	
재정자립도	36.9%	69.7%	29.4%	27.9%
재정자주도	73.7%	76.1%	76.8%	71.1%
지방세	- 제주특별자치도세 - 대통령령 대신 조례로 결정 - 조례로 지방세 감면·세율 조정	세종특별자치시세	-	-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총액의 3%	재정부족액의 25% 이내 추가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 ○ 원칙없는 재정특례, 특별자치시·도 마다 재정지원 상이

- ▶ 제주와 세종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인 보통교부세 특례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강원과 전북은 보통교부세 특례가 없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이 근거 규정만 있고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음
- ▶ 제주가 타 지역에 비해 재정특례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매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3%와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도 고정적으로 받고 있고, 그 외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 제주계정이 있으며, 도세 및 지방세 세율조정 및 감면 등이 있음

- ▶ 세종은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의 재정부족액의 25%이내 추가로 교부받는 특례가 있는데,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까지 3년 연장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특수한 여건과 소속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지원을 받으며,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특례가 있음
- ▶ 강원과 전북은 보통교부세 특례가 없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지만 별도 계정이 마련되지 않음
- ▶ 재정부족액 50% 이내 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25% 등 보통교부세 확대, 강원·전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설치 등 중앙정부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 지속

## □ 재정특례 관련 개선방안

###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재정특례 원칙 설정과 과세자주권 확보에 노력 필요

- ▶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을 염두에 두면서 재정특례의 원칙과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특별시·도 설치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 사용료·수수료 등의 요율을 현실화, 잠재적 세원의 실제 세원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재원을 발굴하도록 재정특례 부여 등 세외수입을 확충 방안 검토
- ▶ 과세자주권을 주는 재정특례를 부여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장기적으로 국세 중에서 적합한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재정특례 방안 검토 필요

## 의정활동 정책제언

### ○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내세워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 우리시는 보통교부세·교부금의 재정부족액 25%이내 추가 교부를 받는 특례가 있지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종계정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임
- ▶ 경기 침체와 세수 급감, 물가 상승 등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으로 추가적인 재정특례 확대와 더 나아가 행정·산업특례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 마련과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02.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 더 나은 방향은?

출처·링크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 더 나은 방향은?'](#)

- 국토교통부 'K-패스'를 비롯한 다수의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운영 시스템의 안정화, 장기이용권의 합리적 선택위한 정보 제공, 사후 성과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주요내용

#### ○ 전국호환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K-패스' 5월부터 전격 시행

- ▶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 후속 사업으로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후 환급하는 제도로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신분당선 등 민자 철도, GTX - A, 광역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월 15회 이상 이용자에 대해 최대 60회까지 지원될 예정임
- ▶ 이용금액 중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의 비율로 환급해 주는데, 청년·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환급 혜택은 있으나, 별도로 어린이·청소년·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추가 환급은 없음
- ▶ 22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8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며,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일정비율로 재정을 각각 부담·지원

#### ○ K-패스와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서울 기후동행카드, 부산 동백패스 등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의 다양한 선택지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 ▶ (서울 기후동행카드) 30일간 서울시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정기권으로 K-패스와 별도로 운영함. 요금은 월 6만 2천원(공유 자전거 '따릉이' 포함 시 6만 5천원)이고 청년(19~34세)의 경우 7천원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중교통을 빈번히 이용하는 시민이 더 큰 혜택을 얻는 구조로 설계
- ▶ (경기도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60회를 초과해 K-패스가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횟수 상한 없이 환급하며,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고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12~24만원의 교통비를 추가 지원함. K-패스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역시 일반 대상으로서

20% 환급해 주나, 인천 I-패스는 이를 확대하여 30% 환급해주는 제도로 기본 K-패스의 혜택에 더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간 비교】**

구분	K-패스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기후동행카드
지원기준	월 15회 이상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자 (카드발급 및 회원가입 필요)			카드구매자
지원방식	사후 환급			사전 결제
지원대상	일반 20% 환급, 청년 30% 환급, 저소득층 53% 환급 (경기·인천은 청년 범위 확대 및 어린이·청소년 지원 추가, 인천은 어르신 환급 혜택 추가)			일반 6만 2천원, 청년 5만 5천원 (따름이 3천원 추가)
지원상한	월 최대 60회	무제한		무제한
이용수단	전철·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 포함)			서울시내, 전철·버스, 따름이, 리버버스
이용지역	전국 (이용자 주소가 등록된 지자체 참여 시)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이용	인천시민이 전국에서 이용	서울시 (김포골드라인, 인천·김포 광역버스 포함 논의중)
시행시기	'24.5월	'24.5월(협의중)		'24.1.27~6.30(시범), '24.7~(본사업)

**○ K-패스 등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 ▶ K-패스와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지역 맞춤형 대중교통이용권 중 이용자들은 자신의 금액별·빈도별 이용 패턴을 고려, 정기이용권별 유·불리를 직접 계산해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따라서 지원 대상별로 비교가능한 시나리오를 다수 비교·분석 및 공시하는 등 친화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선택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K-패스, 지역 맞춤형 대중교통이용권 사업 시행이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는 운용 성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수혜 대상별 효과, 대중교통 이용권 수요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 대중교통 활성화 및 탄소저감, 행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방안 모색 필요

**의정활동 정책제언**

**○ 세종시 '이응패스', K-패스와 연계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 마련 필요**

- ▶ 우리시도 금년 하반기 이응패스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의 후발주자인 만큼 다른 대중교통 정기이용권과 경합이 아닌 연계를 통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03.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기안정화 효과분석

출처·링크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

□ 정부는 2002년부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시행하고 올해는 재정 조기집행 표를 역대최고치인 65.0%로 상향 설정하였음. 이 같은 관행적인 조기집행 목표를 상향하여 설정하기보다 정확한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조기집행 및 목표를 결정하는 등 제도의 제한적 운용 필요성 대두

## □ 재정 조기집행 운용현황과 기대효과

○ 재정 조기집행의 기대효과는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 강화와 예산 집행률 제고를 통한 경기변동성과 예산 불용률 감소

- ▶ 재정조기집행 제도는 2002년부터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예산배정계획 범위 내에서 상반기의 재정집행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시장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투자, 소비 등을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임
- ▶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여 경기변동성을 감소시키며 특히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 경기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어 상·하반기 간 경기변동폭을 경제전망보다 완만하게 만들어 줌
- ▶ 또한, 연초부터 재정집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되는 문제를 없앴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고 불용률을 감소시켜줌

## □ 재정조기집행 목표 및 실적

○ 과거 재정집행이 지속적으로 4분기에 집중되자 상·하반기 간 경기변동을 안정화하고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자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2002년부터 도입

- ▶ 재정 조기집행의 대상은 주요사업비로, 인건비·기본경비 등 조기집행이 곤란한 항목을 제외하고 예산 및 기금의 주요사업비 중 조기집행 가능성 및 관리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조기집행 대상 사업과 목표를 정하고 있음
- ▶ 재정조기집행은 상저하고일 때 효과를 발휘하며, 경제당국의 예측이 틀려 하반기에 경기가 나쁘면 이를 조절할 재정이 부족해지니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재정조기집행은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

## □ 문제점 및 개선과제

### ○ 정확한 경제전망과 재정조기집행 제도의 제한적 운용 필요

- ▶ 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 예상될 때에 상반기 경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재정 조기집행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하반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필요함
- ▶ 경제전망 및 경제 상황 추세와 상관없는 조기집행 결정 및 지속적인 목표 상향 설정은 오히려 경기변동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관행적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하기보다는 제한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고려와 연간 지속적인 재정집행 관리

- ▶ 구체적인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부소비와 정부 투자의 부양 효과 차이, 정부지출의 산업별 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재정집행 관리의 수단 중 하나로서 경기변동 안정화 및 불용률 감소를 목표로 도입된 만큼,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전망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시간 경기진단을 바탕으로 재정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의정활동 정책제언

### ○ 상고하저의 하반기의 부적정 경제상황 대응 전략 수립과 조기집행의 문제점 고찰 필요

- ▶ 관행적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상향하여 설정하기보다는 정확한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조기집행 여부 및 목표를 결정하는 등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 예산의 조기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이자수입 감소 등 재정부담 증가,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시에 의한 경쟁적 실적위주의 조기집행으로 설계 과정과 공사의 부실 초래 등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음
- ▶ 향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하는 것 자체보다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 불용률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중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함

## 04. OECD회원국 교육재정 비교검토와 정책시사점

출처·링크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슈페이퍼 'OECD회원국 교육재정 비교검토와 정책시사점'](#)

□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교육재정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정부간 재정구조를 개편하고 교육자치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OECD회원국 간 교육재정 통계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해하고 관련논의에 참고하고자 함

### □ 우리나라 교육재정 구조 및 관련 이슈

#### ○ 교육재정 개요: 초중등 및 고등교육

- ▶ 초중등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을 두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을 독립적으로 관장하며, 그 재원 출처는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임
- ▶ 한편, 고등교육(대학 등)의 경우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중앙정부가 정책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음

#### ○ 주요이슈

- ▶ 우선 저출산의 여파로 초중등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그에 맞게 조정되지 못하고 경직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곧잘 지적됨
- ▶ 둘째, 구조적 측면에서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이 분리 운영되어 비효율적 재원 배분이 초래되는 문제가 존재함
- ▶ 셋째,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의존도가 높고 세입분권 수준이 낮으며, 고등교육에 관해서는 주요 선진국 대비 재정투입이 미흡하고 대학재정 위축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교육의 질적 저하가 초래된다는 주장이 있음

### □ OECD 회원국 교육재정 비교

#### ○ GDP에 대비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및 고등학교 지출은 각각 3.5%, 1.2%로서 모두 OECD 평균(초중등교육: 3.56%, 고등교육: 1.12%)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남

- ▶ 학생 1인당 기준을 본다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지출(2020년 학생당 1.5만달러)은 OECD 평균(1.1만달러)을 상회함

- ▶ 그러나 학생당 고등교육 지출에서는 우리나라(9.6천달러)가 OECD 평균(1.3만달러) 및 주요국 지출규모(미국: 3.1만달러, 일본 1.9만달러)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초중등 교육과는 대조적임
-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공교육에 대한 지출 수준이 소득 대비 매우 높은 국가에 해당하며, 특히 초중등교육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음
- 아울러, 정부 간 초중등교육 재정부담 및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교육 재원의 80% 이상을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반면, 지방정부가 재원의 대부분을 최종 지출하는 구조임

## □ 정책적 시사점

### ○ 교육재정 수요 변환에 대응한 제도개편 필요

- ▶ 우리나라의 초중등 공교육 재정(지방교육재정)은 양적 규모면에서 빠르게 증가해 왔고 OECD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해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현황으로 교육수요 변화를 반영한 재원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 ○ 중앙 의존성 축소 및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강화

-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인적교류 활성화, 지방교육행정협의회 등 상시적 협의체제 강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통합운영 등의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협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 ○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정부가 2023년부터 고등·평생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전되던 교육세의 일부를 고등교육에 사용토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전환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는 등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의정활동 참고사항

### ○ 2024년 정부의 교육개혁에 따른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 필요

- ▶ 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개혁 등 정부는 교육개혁에 대한 재원 책임을 한시적으로만 약속하고 있어 추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길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에 책임감을 갖고 지방교육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05. 재정 뉴스

---

- 세종시, 정부합동평가 특·광역시 종합 1위 달성 [\[세종특별자치시, 2024. 4. 25.\]](#)
  - 합동평가 역대 최고 성적, 정량평가·정성평가 모두 1위
    - ▶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의 추진 성과 평가하는 제도로, 우리시는 정량평가에서 83개의 지표 중 80개 (96.4%) 지표의 목표 달성 및 정성평가에서는 17개 지표 중 7건의 우수사례가 뽑혀 두 평가 모두 특·광역시 부문 1위 달성하는 쾌거를 거둬
  -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해 포상으로 받은 7억원 대비 더 많은 특별교부세 확보 전망
  
- 지자체 건전재정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2024. 3. 25.\]](#)
  -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 확대운영 및 '헬프데스크' 통한 상시 자문
    - ▶ 최근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의 장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채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 ▶ 자치단체가 협약확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서(안)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협약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
  - '전문가 컨설팅단'이 정기 컨설팅과 병행하여,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자문 창구(헬프데스크)를 설치·운영
  
- 세종시 재정위기 극복, 보통교부세 확대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 2024. 4. 2.\]](#)
  -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보통교부세 전담조직(TF)을 구성
    - ▶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세수 급감과 물가 상승 등 재정이 악화돼 보통교부세 확보는 더욱 절실한 상황
    - ▶ TF 운영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의 수도로서 지위와 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며 보통교부세에 세종시 단층제 특수성과 도시 특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상황을 면밀히 살필 방침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강력 징수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 2024. 4. 3.\)](#)

○ **6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운영, 재정건전성 확보**

- ▶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79억 원으로, 주요 세목은 주정차위반, 정기검사지연, 책임보험미가입 등 차량관련과태료, 과징금, 조정금, 부담금 등
- ▶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방문 징수독려 등 적극적인 체납자 실태조사관리를 추진하고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재산조회를 할 계획이며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등록, 영치폰, 영치차량을 활용한 변호관 영치를 실시
- ▶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계획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기획재정부, 2024. 4. 15.\)](#)

○ 정부는 '24.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6.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

- ▶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위해 '24.4.17.(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24. 5. 1.부터 시행 예정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단위 :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1.11.12 ~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24.6.30.
		△20%	△30%	△37%	휘발유△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7%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 **공유재산 총 조사 최초시행, 지방재정 누수 막는다** [[행정안전부, 2024. 4. 15.](#)]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25년 6월까지 실시하며, 앞으로도 총조사를 5년 주기로 지속 추진할 예정
-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 5,394천 건(토지 5,233천 건, 건물 161천 건/22년말 기준)으로, '수집-분석-후속조치 3단계' 과정으로 진행
  - ▶ 자치단체별로 취득해야 했던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행정안전부가 일괄 수집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 및 공적장부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불일치 사항을 추출
  - ▶ 자치단체는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은 경우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거나 보존 등기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
- '23년 자치단체별로 진행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4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바 있어, 이번 공유재산 총조사는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책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세종시교육청, 학교와 손잡고 이룬 30억원 장려혜택의 결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4.3.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학교회계집행 실적 분석 결과 학교회계 집행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교육부로부터 30억원의 보통교부금 장려혜택(인센티브)를 받게 됨
  - ▶ 관내 학교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을 추진한 결과, 2023회계 연도 마감일인 '24.2.29.까지 원인행위율이 99.2%(예산현액 2,126억원 대비 2,109억원)에 도달하여 당초 목표치를 0.7%P초과 달성
- 학교회계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관내 학교의 월별 집행계획과 추진상황 수시 점검, 현장의 어려운 사항 파악, 학교회계 전출금 조기 교부, 개선과제 발굴 등의 노력을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
  - ▶ 특히, 관내 모든 학교의 학교회계 집행률 달성을 위해 교육청 예산 담당 부서에서 현장지원반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 ▶ K-에듀파인 학교회계 연수, 소소한 학교회계배움, 최신 학교회계 업무안내서 제작 및 배포 등 학교회계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

## III. 재정 정책

### 요 약

-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어떻게 쓸것인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202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내국세분 비율을 상향(3.0% → 3.8%)하여,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재원 마련에 사용하고자 하나 이는 지방교육자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2024년 지방세수 여건 진단과 시사점]** 올해 지방세수입은 작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전망치보다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높은 불확실성에 처해 있는 지방세 세수환경 속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하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활력제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내부경비절감 노력과 시사점]** 최근 경기둔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은 악화된 반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 인구감소 등에 대한 대응 등 현안사업의 수요는 증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증가요인 관리가 필요함

# 01.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어떻게 쓸 것인가?

출처·링크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디지털교육혁신수요'특별교부금 어떻게 쓸것인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202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내국세분 비율을 상향하고(3.0%→3.8%), 상향된 재원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수요에 활용하기로 하였으나, 자칫 지방교육자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 주요내용

○ 2024년부터 3년간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분의 3.0%에서 3.8%로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자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이 2024년 1월 1일 시행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며, 법 3조(교부금의 종류와 자원) 제3항은 교부금 내국세분의 97%와 3%를 각각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재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특례 규정에 따라, 교부금 내국세분 중 특별교부금 비중이 0.8%p 확대되고 그만큼의 보통교부금은 축소됨

○ 교육부는 '디지털교육혁신수요' 5,333억 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정책사업으로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에 3,818억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에 1,515억원을 교부할 예정임

▶ 이에 따라 2024년 특별교부금을 집행하는 경우 교원 연수에 투입되는 예산은 이전에 비해 전폭적으로 늘어날 예정임

※ 최근 5개년 평균 교원연수운영에 투입된 예산은 1인당 약27.7만원이나, 특별교부금이 추가 투입되면 15만명의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은 1인당 예산이 약 3배까지 늘어나고, 선도교사의 경우 28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특별교부금 내국세분 비중의 상향으로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사업의 재원이 대규모로 증가한 한편 2024년 기준 보통교부금 5,333억원이 감액된 결과임

○ 보통교부금 감소는 기존 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특히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의존도와 고정경비의 비중이 높아, 제도의 특성상 세수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보통교부금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더욱 커짐

▶ 따라서 불가피하게 교부율 간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충분히 숙의된 중장기 계획이 전제되어야 지방교육자치의 특수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기회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의정활동 참고사항

- 교육부는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의 2024~2026년 연도별 재원의 투자·배분 및 사업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음
  - ▶ 2023년 12월 31일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별 소요 재정 규모에 대한 면밀한 비용추계와 사업 내용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 등 2024년 계획수립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음
  - ▶ 이에, 3년간 재원 투입이 목적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본격적으로 집행하기 전에 법률이 정한 특별교부금 용도에 따른 내용을 구체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므로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디지털교육혁신에 투자된 재원을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 등과 적극 협의하여 '26년까지 단계적인 사업의 로드맵을 확정하여 보다 내실있게 재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디지털교육혁신 수요'사업비는 교육청의 대응투자 없이 특별교부금을 전액 교부하고, 3년 이내에 종료해 할 것임
  - ▶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및 절차 등은 국가시책사업 운영기준을 준용할 것으로 보이나, 추후 지방이양 등을 이유로 교육청의 대응투자를 요구하게 되면 사실상 보통교부금을 추가 잠식할 우려가 있으며,
  - ▶ 3년 이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추가 소요를 이유로 부칙의 유효기간을 개정하여 보통교부금의 부담을 지속하여 지방교육자치의 특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확대할 우려가 크므로, 불가피하게 기간 및 재원이 추가 소요되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증액교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2024년도 특별교부금으로 확정된 '디지털교육혁신수요'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어 수요의 적정성·타당성 등에 대한 시의회 예산심사권 침해 가능
  - ▶ 특히,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사업의 경우 교원연수 관련 비중이 높은바, ①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집행되었는지, ②사업의 실제적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검토가 필요하며,
  - ▶ 2024년도 일반재원 사업인 'ICT활용교육지원' 사업과 특별교부금 사업인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사업이 유사·중복될 경우 재정낭비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02. 2024년 지방세수 여건 진단과 시사점

출처·링크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슈페이퍼 '2024년 지방세수 여건 진단과 시사점'](#)

□ 올해 지방세수입은 2023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전망치보다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높은 불확실성에 처해 있는 지방세 세수환경 속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하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활력 제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 주요내용

- 2024년 세수 환경을 짚어보면, 지방세수입이 2023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세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2023년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13.1%(51.9조원) 감소, 지방세수는 전년대비 6.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 2024년 정부예산안 기준, 국세수입은 2023년 결산액 대비 6.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이 정부예산안보다 1.6% 낮을 것으로 전망
  - ▶ 반면, 지방세는 한국지방세연구원 내부 분석에 따르면 전년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최근 경제성장 전망, 소비자물가, 금리 상황, 부동산시장 동향 등 주요 지표들을 검토해 본 결과, 올해 지방세수입은 당초 전망치보다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 ▶ 올해 발표된 2024년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가 이전에 비해 하향조정되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한 소폭 상향조정 되었음. 부동산시장은 올해 들어 미미하게나마 개선되고 있으나, 회복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임
  - ▶ 우리 경제의 최대변수라 할 수 있는 기준금리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 인하시기가 하반기로 조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임
- 높은 불확실성에 처해 있는 지방세 세수환경 하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하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활력제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 과거 「중앙정부 기획 + 지방정부 집행」이라는 틀에서 「지방정부 기획 + 지방정부 집행 + 중앙정부 지원」의 틀로 전환하는 한편, 성장친화적 관점에서 지방세제 재설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의정활동 참고사항

【전국, 세종시 지방세(보통세) 세입 추계】

(단위:억원)

구분	전국			세종시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1,041,464	1,026,685	1,025,541	7,611	6,967	7,873
취 득 세	285,105	236,217	246,952	2,335	1,606	2,168
지방소비세	216,032	242,991	245,665	2,050	2,318	2,472
지방소득세	204,593	219,432	199,068	999	985	1,079
재 산 세	157,405	148,937	150,273	1,169	1,052	1,081
자동차세	75,299	73,106	76,419	631	555	602
담배소비세	35,078	35,458	35,135	166	175	175
주 민 세	22,771	24,824	26,385	130	142	143
기 타	45,181	45,721	45,644	131	134	153

자료 : 지방재정365 / 2022~2023 최종예산, 2024당초예산 기준

### ○ 정확한 분석과 꼼꼼한 검토로 세입추계의 신뢰성 제고 필요

- ▶ 보수적인 세수 추계는 지출 요인을 축소시키는 원인이 되며, 과대추계로 예상치 못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 세출예산 감액 및 구조조정 등 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에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 필요

### ○ 향후 경기회복 양상이 지역별로 차등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역맞춤형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세종시의 경우 2023년 부동산시장 부진에 따른 심각한 세수결손을 경험하였으나, 2024년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지방세수입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 2024년은 경기회복 국면이므로 소득과 소비 관련 세수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부동산시장의 지역별 회복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그로 인해 지역 간 세수회복세도 뚜렷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 부동산시장의 단기적 변동은 시장 기대심리에 크게 좌우되는 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03.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내부경비절감 노력과 시사점

출처·링크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슈페이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내부경비절감 노력과 시사점'](#)

□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초를 뒷받침하여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입확충 노력과 병행하여 세출의 축소(합리화)가 필요한 시점임

### □ 지방자치단체 세입여건 악화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증대

- 최근 경기둔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은 악화된 반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감소 등에 대한 대응 등 현안사업의 수요는 증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감소,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은 어려움에 직면함
  - ▶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 인구소멸 가속화와 연계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기간 감소했던 자체경비, 업무추진비, 행정운영 경비 등 내부경비가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2022년 모두 증가세로 전환됨
  - ▶ 자체경비비율은 2019년 10.21%에서 2021년 9.31%까지 지속 감소했다가 2022년 전년대비 0.3%p 증가한 9.61% 수준
  - ▶ 업무추진비절감률은 2018년 22.41%에서 2021년 31.58%까지 지속 상승했으나 2022년에는 전년대비 7.33%p 감소한 24.25% 수준
  - ▶ 행정운영경비비율은 2018년 9.80%에서 2021년 7.64%까지 지속 감소했다가 2022년에는 전년대비 0.36%p 증가한 7.70% 수준
-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초를 뒷받침하여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구조의 혁신을 통해 지출 증가요인을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음
  - ▶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전략적 예산운용을 통해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세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함

- ▶ 자체경비비율을 낮추기 위해 예산편성시 자체경비 구성항목별로 부서별 감액 목표를 설정하거나 유보액을 설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 업무추진비절감률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동결하거나 전년대비 의무절감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자체 재정여건 개선을 추진해나가야 함
- ▶ 행정운영경비비율을 낮추기 위해 인력운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인력증원 최소화,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등이 필요함

## □ 시사점

- **최근 경기둔화 및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
  - ▶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감소,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됨
-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감소 등에 대한 대응 등 현안사업의 수요는 날이 증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짐**
  - ▶ 코로나19 위기 완화 등에 따라 백신·방역 비용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 한시 지출은 감소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 인구소멸 가속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여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입확충노력과 병행하여 세출의 축소가 필요한 시점임**
  - ▶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전략적 예산운용을 통해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함
  - ▶ 내부경비비율 축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절감노력이 중요하며, 타 자치단체의 내부 경비 절감 우수·미흡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경비절감과 지출효율화에 힘써나가야 함

## IV. 경제 동향

### 요 약

- **[정부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흐름과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으나, 재화소비 둔화건설 선행 지표 부진 등 경제 부분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음
- **[정부 재정동향]** 2월 누계 총수입은 국세·기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97.2조원,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지출증가로 127.1조원
- **[KDI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나, 수출이 IT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
- **[NABO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둔화와 중동정세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
- **[최근 세종지역 실물경제 동향]** 2024년 2월중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투자가 개선되었으나 소비는 지표별로 차별화되는 모습

# 01. 정부 경제동향

출처·링크 [기획재정부, 4월 최근 경제동향](#)

-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흐름과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으나, 재화소비 둔화·건설 선행지표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
  - ▶ 대외적으로는 IT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 및 세계경제 연착륙 기대가 이어지고 있으나, 러-우크라 전쟁 및 중동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 지속
  - ▶ 정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에 총력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내수 취약부문 온기 확산 등 균형잡힌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철저한 잠재위험 관리와 혁신·공정·이동성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노력 병행
  
- **‘24.2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는 증가, 소매판매, 건설투자는 감소**
  - ▶ 생산은 건설업 생산 감소에도, 광공업 생산(전월비 3.1%, 전년동월비 4.8%) 및 서비스업 생산(전월비 0.7%, 전년동월비 1.2%)이 증가하여 총산업 생산(전월비 1.3%, 전년동월비 2.0%) 증가
  - ▶ 지출은 소매판매(전월비 △3.1%, 전년동월비 0.9%), 건설투자(전월비 △1.9%, 전년동월비 0.5%)는 감소, 설비투자(전월비 10.3%, 전년동월비 △0.3%)는 증가
  - ▶ 소비자심리<’24.3월 CSI 100.7(전월대비 △1.2p)>, 기업심리 전망<전산업 BSI 4월 전망 71(전월대비 △1p)>은 하락, 기업심리 실적<전산업 BSI ’24.3월 실적 69(전월대비 1p)>은 상승
  - ▶ ’24.2월 경기동행지수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모두 상승(전월대비 각각 +0.2p, +0.1p)
  
- **‘24.3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 물가는 상승폭 유지**
  - ▶ ’24.3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7.3만명 증가,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 ’24.3월 소비자물가는 상승폭 유지(’24.2월 3.1%와 동일),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2.4%,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2.4%, 생활물가지수는 3.8% 상승
  
- **‘24. 3월 중 금융시장은 美 연준 금리인하 전망 유지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주가는 반도체 업황 개선등에 힘입어 상승, 환율은 견고한 美 경제지표 등으로 상승**
  - ▶ ’24.2월 중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하락, 전세가격 상승

## 02. 정부 재정동향

출처·링크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4월호](#)

- **2월 누계 총수입은 국세·기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97.2조원, 진도율은 15.9%**
  - ▶ (국세수입) 2월 누계 국세수입은 58.0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8조원 증가
    -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불구,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  $\Delta$ 12.9조원, 이자소득 등 원천분 증가로 +0.1조원 증가에 따라 법인세 +0.1조원, 신고납부 증가 및 환급 감소 등에 따라 +3.7조원, 수입감소 등에 따라 관세  $\Delta$ 0.1조원 등
  - ▶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5.5조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 ▶ (기금수입)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3.4조원 증가한 33.7조원
  
-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지출증가로 127.1조원, 진도율은 19.4%**
  
- **통합재정수지는 29.9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6.3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6.2조원 적자**
  
- **24.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4조원(경쟁입찰 기준 15.0조원)**
  - ▶ 3월 국고채 금리는 전년말 국채금리 급락에 대한 조정 국면 마무리,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주요국 통화정책 등에 따라 소폭 하락세
  - ▶ 1~3월 국고채 발행량은 48.3조원으로 3월 조달금리는 전월(3.36%) 대비 하락한 3.32% 수준이며, 응찰률은 334%로 전월(335%) 대비 하락
  - ▶ 3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만기도래 집중으로 (국고채7.0조원역대2위) 순유출( $\Delta$ 5.1조원) 되었으며, 이에 외국인 국고채 보유비중은  $\Delta$ 0.4% 감소(21.4%)

## 03. KDI 경제동향

출처·링크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동향 4월호](#)

### □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나, 수출이 IT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

- ▶ 글로벌 반도체경기 반등에 따른 수출의 높은 증가세가 경기 부진 완화를 이끄는 모습
- ▶ 다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소비는 부진한 모습인 한편,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운송 차질 등의 대외 위험요인은 지속

### □ 주요 경제지표

- ▶ (경기) 내수가 여전히 미약하나, 반도체생산이 급증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
- ▶ (소비) 상품소비의 위축이 지속된 가운데, 서비스 소비도 낮은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전월의 부진한 모습이 유지
- ▶ (설비투자) 아직 부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반도체경기 회복에 따라 긍정적 신호도 일부 나타남
- ▶ (건설투자) 둔화 흐름을 유지한 가운데, 관련 선행지표의 부진도 지속됨
- ▶ (수출) IT 품목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는 모습
- ▶ (노동시장)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되고 그동안 이례적으로 낮았던 실업률이 4대를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는 등 고용 여건은 완만하게 조정되는 모습
- ▶ (물가)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소비 부진이 반영되며 기초적인 물가상승세는 둔화 흐름을 유지
- ▶ (금융시장) 가계와 개인사업자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나, 전월에 이어 주가가 상승한 가운데 단기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
- ▶ (부동산시장) 매매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 둔화가 지속
- ▶ (세계경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가 상승과 운송 차질 등 위험요인도 상존

## 04. 지표로 보는 충청권 경제동향

출처·링크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3월호

### □ 1/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은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

- ▶ 반도체, 석유화학 및 의약품은 소폭 증가한 반면, 자동차 및 부품이 감소, 디스플레이 및 전기장비 등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철강은 보합 수준
- ▶ 운수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은 소폭 감소

### □ 1/4분기 중 민간소비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전분기와 유사

- ▶ 민간소비는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 재화 소비가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서비스 소비가 소폭 감소
- ▶ 설비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는 소폭 증가하였고 석유화학 및 철강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전기장비는 전분기와 비슷함
- ▶ 민간부문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착공실적 개선세가 나타나며 소폭 증가하였으나, 공공부문은 지자체의 SOC 예산 집행액 축소로 소폭 감소

### □ 1/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

- ▶ 반도체, 석유화학 및 철강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및 부품, 디스플레이 및 전기장비는 소폭 감소

### □ 1/4분기 중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 ▶ 1~2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1.8만명 늘어나 2023년 4/4분기(+2.2만명)보다 증가폭이 축소
- ▶ 지역별로는 충북은 증가폭이 확대, 세종·충남은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대전은 감소폭이 확대

### □ 주택매매가격 하락 전환 및 전세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 ▶ 1~2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2.8% 상승하여 2023년 4/4분기(+3.2%)보다 상승폭이 축소
- ▶ 1~2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 전분기말월대비)은 2023년 4/4분기 상승(+0.12%)에서 하락 전환(-0.10%), 전세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0.02% 상승하며 2023년 4/4분기(+0.27%)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
- ▶ 지역별로 주택매매가격의 경우 대전·충남·충북이 하락전환 하였으며 세종의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며, 전세가격의 경우 대전·충북은 상승폭이 축소되었고 세종·충남의 경우엔 하락 전환

## 05. NABO 경제동향

출처·링크 [국회에산정책처, NABO 경제동향 \(제42호\)](#)

-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 둔화와 중동정세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
  - ▶ 글로벌 반도체경기 반등에 따라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며,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운송 차질 등의 대내외 위험요인은 지속
  
- **2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비내구재의 부진이 지속**
  -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12월)0.5 → ('24.1월)1.0 → (2월)-3.1
  
- **2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증가, 전년동월대비 감소**
  - ▶ 설비투자(전월대비, %): ('23.12월)2.3 → ('24.1월)-5.9 → (2월)10.3
  
- **2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과 토목 모두 감소 전환**
  -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3.12월)-3.6 → ('24.1월)13.8 → (2월)-1.9
  
- **3월 「무역수지」는 42.8억달러 흑자로 흑자폭 확대**
  -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한 565.6억달러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
  -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2.3% 감소한 522.8억달러를 기록하면서 13개월 연속 감소
  
- **3월 「소비자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 물가가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
  -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1월)2.8 → (2월)3.1 → (3월)3.1
  
- **2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12월)0.4 → ('24.1월)7.4 → (2월)2.0
  -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3.12월)0.4 → ('24.1월)0.4 → (2월)1.3
  
- **3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소폭 상승**
  - ▶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7.3만명 증가한 2,839.6만명으로 증가세 둔화, 실업률은 전년 동월대비 0.1%p 증가한 3.0%를 기록
  
- **3월 국내 금융시장은 「국고채금리」는 하락, 「원/달러 환율」은 상승**

# 06. 최근 세종지역 실물경제 동향

출처·링크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2024.4](#)

□ 2024년 2월중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투자가 개선되었으나 소비는 지표별로 차별화되는 모습

## 세종지역 실물경제 관련 지표

(전년동기대비, %)

		2023년						2024년	
		연간	2월	1/4	2/4	3/4	4/4	1월p)	2월p)
제조업 생산	생산지수	-6.2	-4.9	-8.1	-2.4	-8.6	-5.9	12.8	5.4
	출하지수	-2.3	2.2	-2.2	-1.0	-3.5	-2.4	5.5	-1.1
	재고지수	8.8	31.0	27.5	45.0	28.9	8.8	0.0	-0.8
소비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1)	0.7	-0.2	-5.4	2.1	3.6	3.1	-7.0	21.0
	승용차신규등록대수	6.0	28.5	11.2	5.1	6.5	1.5	18.6	-8.8
투자	자본재수입	36.9	43.9	75.6	64.9	20.5	10.1	-13.1	32.6
	건축착공면적	-56.2	-73.1	-49.8	-70.7	-21.4	-66.6	21.2	1,492.4
	건축허가면적	-47.6	88.1	-43.9	-59.5	-52.2	-17.5	-12.0	60.6
대외거래	수출	-23.0	-39.5	-34.4	-31.7	-23.1	1.1	31.4	55.5
	수입	-10.8	12.5	-9.4	-5.2	-19.4	-9.3	34.6	2.0
고용	취업자수증감(천명)	10.8	15.3	16.2	12.3	9.5	5.1	3.4	1.1
	고용률	64.6	63.0	63.5	65.7	65.2	64.0	62.7	62.6

주: 1) 매장면적 3천㎡ 이상, 불변지수(2020=100) 기준 /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국토교통부

- ▶ (제조업 생산) 2024년 2월중 세종지역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은 증가폭이 축소
- ▶ (소비) 2024년 2월중 세종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전년동월대비)는 증가로 전환
- ▶ (설비·건설투자) 2024년 2월중 세종지역 자본재 수입(전년동월대비)은 증가로 전환
- ▶ (수출입) 2024년 2월중 세종지역 수출(전년동월대비)은 증가폭이 확대
- ▶ (고용) 2024년 2월중 세종지역 취업자수(전년동월대비)는 증가폭이 축소
- ▶ (소비자물가) 2024년 3월중 세종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전월에 비해 하락(2월 3.0% → 3월 2.8%)
- ▶ (주택가격) 2024년 2월중 세종지역 주택매매가격(전월대비)은 하락폭이 확대

## 세종지역 물가 관련 지표【세종지역 물가 관련 지표】

(단위 : %)

	2023년							2024년			
	연간	2월	3월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소비자물가	3.0	4.5	3.6	4.3	2.6	2.4	2.7	2.8	2.5	3.0	2.8
주택매매가격1)	-3.60	-2.94	-0.21	-7.15	2.40	1.52	-0.12	..	-0.34	-0.95	..
주택전세가격2)	-2.74	-2.92	-0.52	-7.50	0.82	2.19	2.06	..	-0.08	-1.07	..

주: 1) 전년동기대비 2) 전기대비. 단, 분기 및 연간은 전기말월대비 당기말월 기준 / 자료: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 V. 재정 통계

###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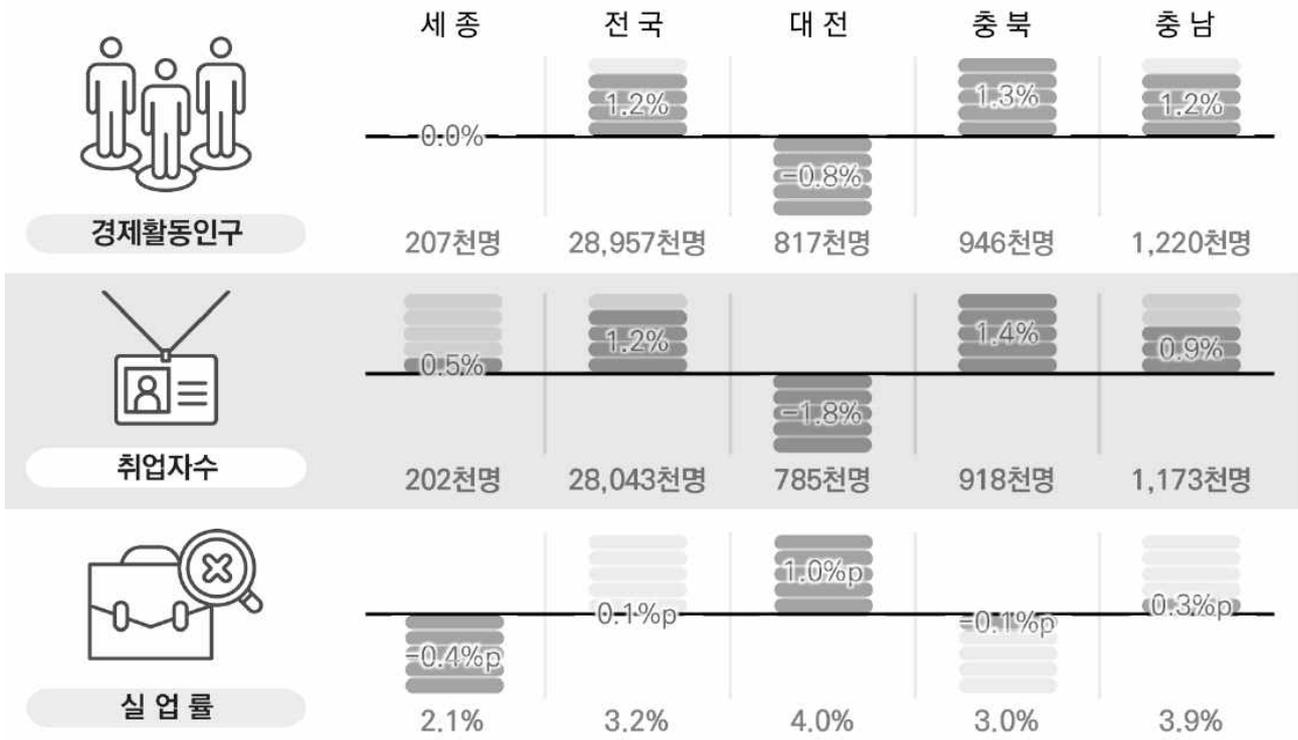
- [주요 경제지표] 고용, 생산, 소비, 부동산, 수출입, 금융, 지역특성 통계자료
- [세종시 주요 통계] 기본현황, 재정·경제, 교육·문화, 보건·복지, 환경·녹지, 건설·교통, 소방·안전
- [세종시교육청 주요 통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직원수, 입학자, 졸업자

# 01. 주요 경제지표

출처·링크 대전세종연구원, 월간세종경제 3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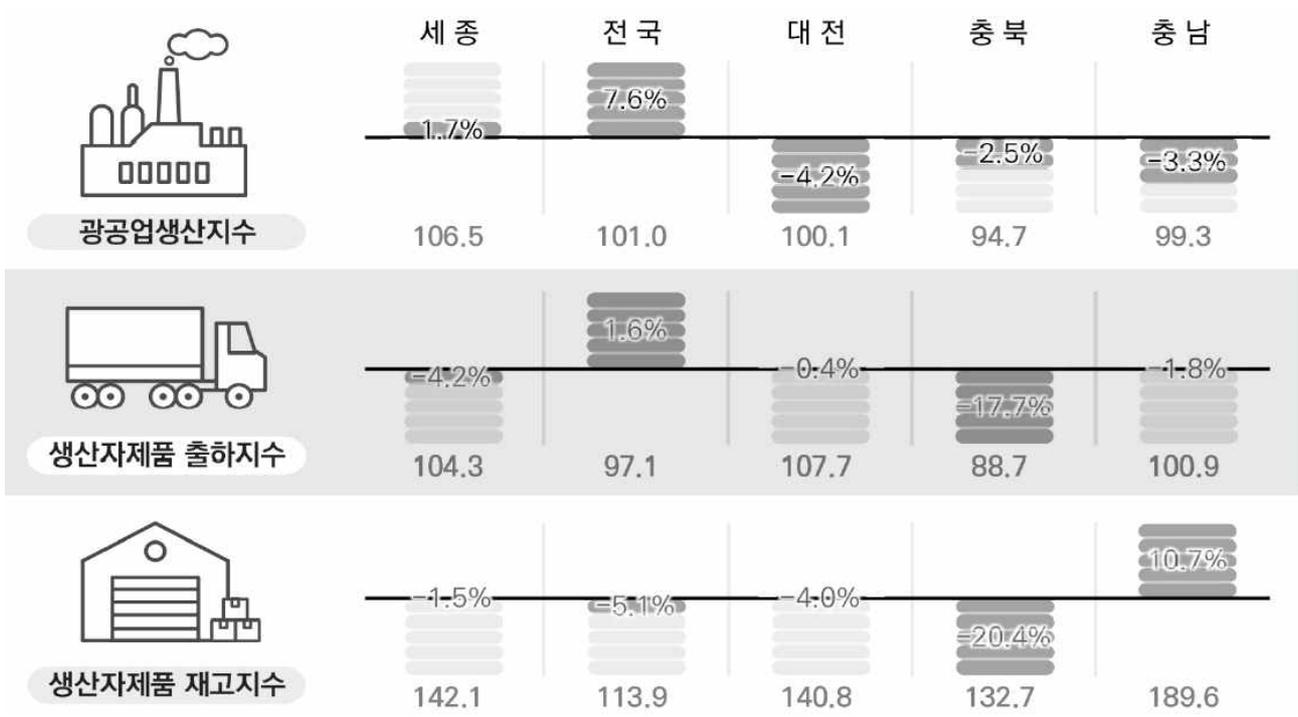
## 고 용 | 전년동월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전년동월차(실업률)

24. 2.



## 생 산 | 전년동월비/2020=100(광공업), 100(소상공인, 전통시장)

2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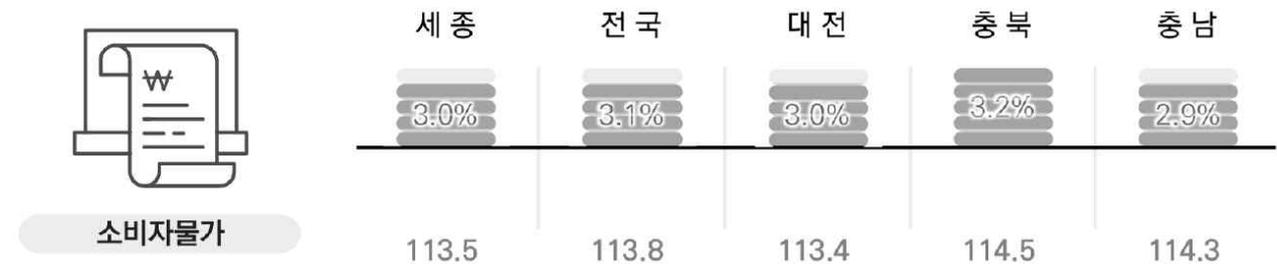
생 산 | 전년동월비/2020=100(광공업), 100(소상공인, 전통시장)

2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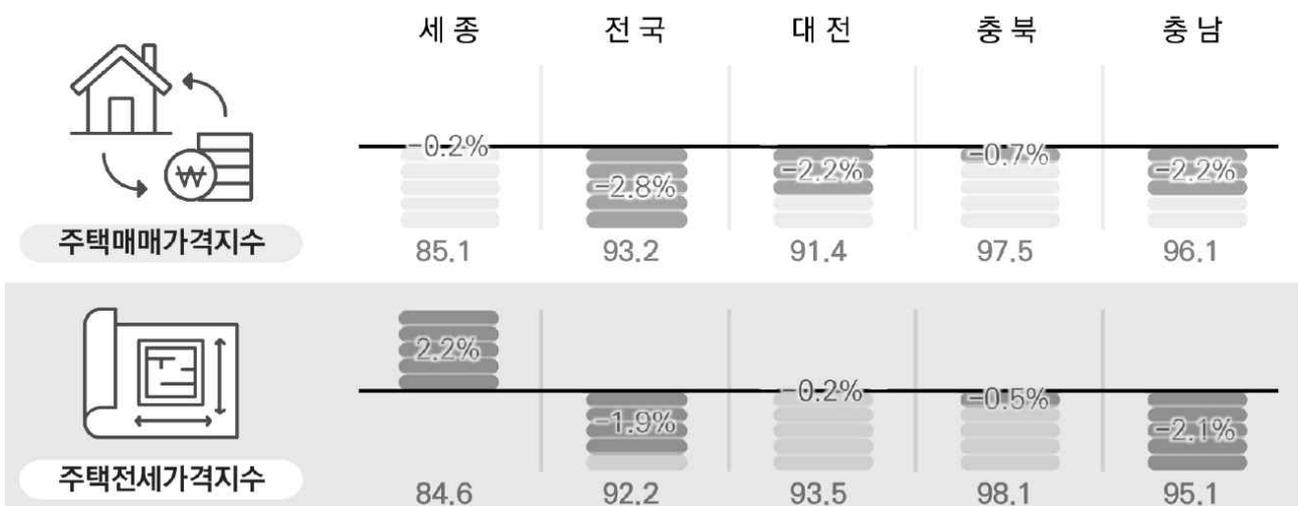
소 비 | 전년동월비/2020=100

24. 2.



부동산 | 전년동월비/2022.1=100

2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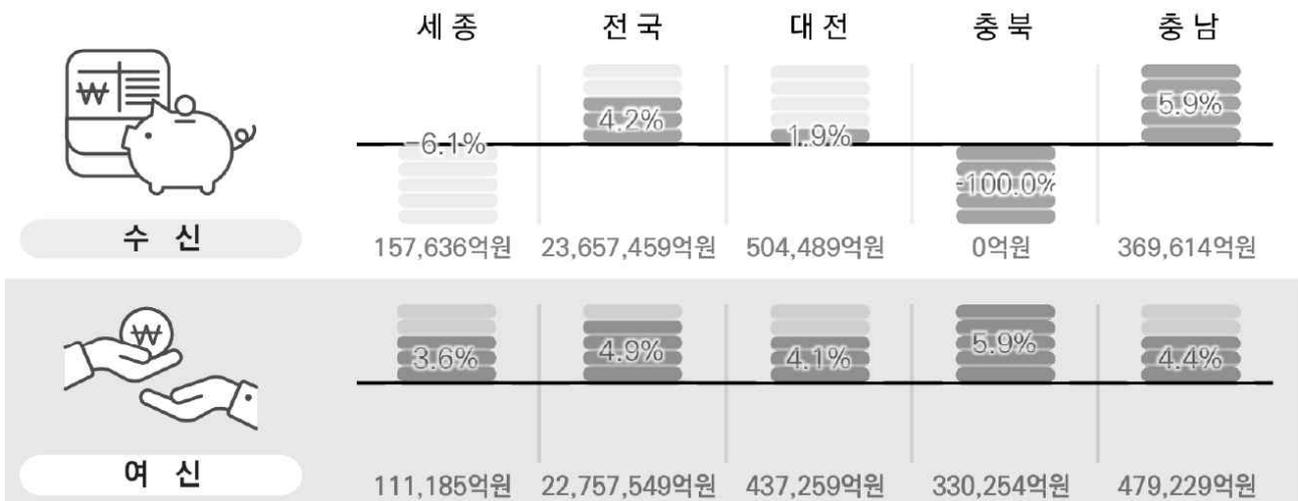
수출입 | 전년동월비

24. 2.



금융 | 전년동월비

24. 2.



지역특성 | 전년동월비

2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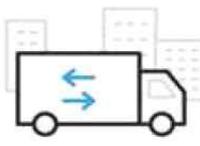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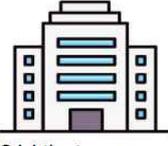
## 02. 세종시 주요 통계

출처·링크

세종시누리집, 세종의 현황

2023년 말 기준 (\*2022년 말 기준)

자료: 2024 시정 주요 통계

기본현황	 총 인구 392,311명	 세대 수 160,835세대	 평균연령 38.6세	 *합계출산율 1.12명
	 전입 56,050명	 전출 54,360명	 중앙행정기관 47개	 국책연구기관 16개
재정·경제	 예산 2조28억	 지방세 7,764억	 *사업체 수 33,076개	 *종사자 수 158,168명
교육·문화	 학교 수 182개	 학생 수 90,189명	 영화관 4개소	 박물관 6개소
보건·복지	 의료기관 610개소	 의료인력 2,147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8,607명	 장애인 12,944명
환경·녹지	 미세먼지 $38\mu\text{g}/\text{m}^3$ (기준치 $50\mu\text{g}/\text{m}^3$ 이하)	 상수도 보급률 99.8%	 하수도 보급률 98.0%	 도시공원 186개
건설·교통	 *주택보급률 105.6%	 자동차등록 198,110대	 주차장 10,662개	 시내버스, BRT 365대
소방·안전	 공영자전거 3,422대	 화재발생 219건	 구급이송 12,388명	 범죄검거율 70.1%

# 03. 세종교육통계 주요지표

출처·링크

세종시 교육청 누리집, 세종교육통계 주요지표

## 세종시 학교 총 개황

학교급	설립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총계	공립	158	162	165	2,988	3,179	3,309	61,502	64,449	66,354		
	사립	3	3	3	32	31	29	639	682	687		
	계	161	165	168	3,020	3,210	3,338	62,141	65,131	67,041		
유치원	공립	60	62	63	418	433	434	6,474	6,311	6,178		
	사립	2	2	2	8	7	5	126	111	76		
	계	62	64	65	426	440	439	6,600	6,422	6,254		
초등학교	공립	51	52	53	1,472	1,587	1,650	30,726	32,230	32,614		
	계	51	52	53	1,472	1,587	1,650	30,726	32,230	32,614		
중학교	공립	26	27	27	609	643	658	13,822	14,809	15,500		
	계	26	27	27	609	643	658	13,822	14,809	15,500		
고등학교	계	공립	20	20	20	455	481	519	10,305	10,913	11,833	
		사립	1	1	1	24	24	24	513	571	611	
		계	21	21	21	479	505	543	10,818	11,484	12,444	
	일반고	공립	14	14	14	355	375	413	8,407	8,953	9,873	
		사립	1	1	1	24	24	24	513	571	611	
		계	15	15	15	379	399	437	8,920	9,524	10,484	
	특성 화고	직업	공립	2	2	2	30	36	36	495	570	564
			계	2	2	2	30	36	36	495	570	564
	특수 목적고	일반	공립	3	3	3	45	45	45	795	779	788
			계	3	3	3	45	45	45	795	779	788
	자율고	공립	1	1	1	25	25	25	608	611	608	
		계	1	1	1	25	25	25	608	611	608	
특수학교	공립	1	1	2	34	35	48	175	186	229		
	계	1	1	2	34	35	48	175	186	229		

주:학급수는 편성학급 기준임

(단위 : 개교, 개, 명)

교원수			직원수			입학자			졸업자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5,675	6,062	<b>6,320</b>	512	527	<b>536</b>	16,440	17,385	<b>18,087</b>	14,041	15,178	<b>16,443</b>
60	65	<b>60</b>	4	4	<b>4</b>	265	264	<b>231</b>	224	201	<b>200</b>
5,735	6,127	<b>6,380</b>	516	531	<b>540</b>	16,705	17,649	<b>18,318</b>	14,265	15,379	<b>16,643</b>
953	1,020	<b>1,048</b>	98	108	<b>104</b>	2,966	2,842	<b>2,840</b>	2,654	2,757	<b>2,829</b>
11	14	<b>9</b>	-	-	-	67	61	<b>23</b>	48	54	<b>40</b>
964	1,034	<b>1,057</b>	98	108	<b>104</b>	3,033	2,903	<b>2,863</b>	2,702	2,811	<b>2,869</b>
2,268	2,425	<b>2,503</b>	208	207	<b>212</b>	5,091	5,525	<b>5,299</b>	4,871	4,865	<b>5,306</b>
2,268	2,425	<b>2,503</b>	208	207	<b>212</b>	5,091	5,525	<b>5,299</b>	4,871	4,865	<b>5,306</b>
1,254	1,341	<b>1,392</b>	90	98	<b>97</b>	4,910	4,961	<b>5,363</b>	3,666	4,223	<b>4,786</b>
1,254	1,341	<b>1,392</b>	90	98	<b>97</b>	4,910	4,961	<b>5,363</b>	3,666	4,223	<b>4,786</b>
1,135	1,208	<b>1,292</b>	105	103	<b>108</b>	3,432	3,986	<b>4,509</b>	2,818	3,270	<b>3,472</b>
49	51	<b>51</b>	4	4	<b>4</b>	198	203	<b>208</b>	176	147	<b>160</b>
1,184	1,259	<b>1,343</b>	109	107	<b>112</b>	3,630	4,189	<b>4,717</b>	2,994	3,417	<b>3,632</b>
828	901	<b>977</b>	71	71	<b>73</b>	2,771	3,322	<b>3,824</b>	2,242	2,711	<b>2,816</b>
49	51	<b>51</b>	4	4	<b>4</b>	198	203	<b>208</b>	176	147	<b>160</b>
877	952	<b>1,028</b>	75	75	<b>77</b>	2,969	3,525	<b>4,032</b>	2,418	2,858	<b>2,976</b>
85	88	<b>88</b>	14	11	<b>14</b>	192	189	<b>207</b>	106	90	<b>203</b>
85	88	<b>88</b>	14	11	<b>14</b>	192	189	<b>207</b>	106	90	<b>203</b>
162	162	<b>167</b>	16	16	<b>16</b>	270	271	<b>275</b>	264	268	<b>253</b>
162	162	<b>167</b>	16	16	<b>16</b>	270	271	<b>275</b>	264	268	<b>253</b>
60	57	<b>60</b>	4	5	<b>5</b>	199	204	<b>203</b>	206	201	<b>200</b>
60	57	<b>60</b>	4	5	<b>5</b>	199	204	<b>203</b>	206	201	<b>200</b>
65	68	<b>85</b>	11	11	<b>15</b>	41	71	<b>76</b>	32	63	<b>50</b>
65	68	<b>85</b>	11	11	<b>15</b>	41	71	<b>76</b>	32	63	<b>50</b>